

월/요/광/장

이상갑



범여권 유력 대선 예비주자로 거론되던 정문찬 전 서울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1월 16일 고건 전 총리가 뜻을 접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정치권에서는 행정가나 학자 출신의 한계를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는 불출마선언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고건 총리가 대선주자 1위로 부각된 것은 2004년 말 총리 퇴임 직후였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불안정한 국정운영과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국민들은 안정감 있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건 총리는 2004년 특수한 정치상황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고건 총리의 평균 지지율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30.0%,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 23.3%,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 14.9%였다. 고건 총리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재·보선 0대 40이라는 참담한 성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범여권의 소방수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를 받았다. 자신

의 비전을 제시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였던 셈이다.

그러나 고건 총리는 대선주자에 안주하면서 '불개입 선언'을 하고 나섰다. 그 영향으로 지방선거 직후인 6월, 지지율이

20%대 초반대로 하락하면서 한나라당 박 전 대표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7월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게도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가 결국 불출마를 선언해야 했다.

정문찬 전 총장은 총장 재직 때부터 잠룡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주목을 받은 것은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와 하반기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였다. 고건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한 반면 이명박 전 시장이 지지율 1위로 올라서면서 이 전 시장의 대항마로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다.

정문찬 총장도 이 때부터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말 총남 공주항우회에

서 "총청인이 나라 가운데서 중심으로 잡아야겠다. 공주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지역기반 구축을 시도했다. 지난 2월부터는 전국 순회 특강정치를 통해 부동산정책과 3불정책, 한미FTA 등 국정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 전 총장의 지지율은 정치권과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이 4개월 이상 계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 전 총장은 낮은 지지율과 정치 세력화라는 현실적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하고 만 것이다.

고건·정문찬의 중도하차

돌이켜보면 두 대선 예비주자의 중도하차는 어쩌보면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종합적 설계도를 제시하면서 지지 호소한 적이 없다.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가는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단지 지리멸렬한 범여권의 상황,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덕에 '주어진' 제 3의 후보라는 지위를 누렸을 뿐이다.

정치권은 다시 제2의 고건, 제2의 정문찬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누가

서부벨트를 재건할 수 있을지가 유력한 기준이다.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이나 우리 사회에 전반에 대한 그랜드비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우리 모두 또 다른 '고건 현상'이나 '정문찬 현상'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도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자. 서민의 시각에서 우리 사회를 깊이있게 성찰하는 자세와 제시하는 비전 및 정책, 살아온 이력을 중심으로 판단해보자.

다시 5월이 왔다. 1980년 5월의 시대적 과제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면, 2007년 5월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구현이 아닐까 싶다. 수입입금과 저부가가치, 대기업에 의존한 수출주도형 발전모델로는 더 이상 글로벌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낼 수도 없다.

1997년 외환위기는 건국 이후 50년간 지속되어 온 성장모델에 파탄을 선고한 사건이다. 오늘의 현실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정치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지식기반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세력과 정치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본격화 대책 서둘러라

지난달 말 검역을 통과해 3년 5개월여 만에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이 밀려든다. 이른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일반 식당이나 가정의 식탁에 미국산 쇠고기가 오를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국내 축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우 값은 지난달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한달 새 20%나 떨어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우 값의 폭락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의 현지 가격은 한국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가격경쟁으로는 미국산에 도저히 승산이 없는 셈이다. 더욱이 국내 소비자들은 수입산 쇠고기와 관련해 55.8%가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우 값이 살아남는 길은 품질 경쟁에서 이기는 것 밖에 없다. 미국산보다 품질 좋은 한우 쇠고기는 비싸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사 먹으

러 하기 때문이다. 한우 쇠고기 가격의 거품을 빼는 것도 중요하다. 산지 소값은 20% 이상이 떨어졌는데도 소비자가 가격은 겨우 1~2% 하락에 그치고 있다. 이례선 미국산 쇠고기에 국내 소비시장을 내 줄 수밖에 없다. 현재 3~4단계에 이르는 유통과정을 1~2단계로 줄이고 연동가격제 실시 등으로 40%에 이르는 유통 마진율을 대폭 줄여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식당의 원산지 표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기 원산지 표시제는 영업장 면적 90평 이상의 대형 음식점에 국한돼 있다. 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식당에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건강 측면에서도 그렇다.

정부는 한우 쇠고기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 축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 20%가 빛으로 생활하는 경제현실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바닥 수준이라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보고서를 통해 198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해온 저축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2%를 기록한 뒤 더욱 줄어들어 지난해 3.5%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계층은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커녕 빚을 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14.8%, 2004년 -17.5%, 2005년 -13.5% 등 마이너스 저축률을 기록한 것이다.

소득 계층간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저축률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35.4%포인트에서 2005년 51.0%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런 추세에선 우리 사회의 병폐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인 가계의 저축률 하락은 심각한 문제다. 저축률이 떨어지면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가 타격을 받게 된다. 저축률 하락-투자부진-소득 감소-소비 축소-저축률 하락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전망이 밝은 것도 아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득분배구조나 실업률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 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면 가계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하위 20% 계층의 빚은 대부분 생계형 차입이라고 한다.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용과 원리금 상환 등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치여 있다는 것이다. 빚과 이자의 늪에 빠진 가정들은 기초생활마저 위협받게 되고 결국 정부의 재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저소득층 및 청년층, 노인층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금리인상 자체 등 대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사회적 약자들을 방치해선 국가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無等鼓

지난 2000년 삼성자동차를 인수한 프랑스 자동차회사 '르노'는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르노의 창업자는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아버지'인 루이 르노(1871~1944)다. 그러나 그는 '조국을 배반했다'는 불명예에 속어 죽었다.

르노는 독일에 의해 점령된 파리가 해방된 직후인 1944년 9월 23일 전격 구속됐다. 67세의 고령이었던 그는 불과 10일 후인 10월 3일 감옥 병실에서 뇌출혈로 사망했다. 르노가 구속된 이유는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됐을 당시 트럭과 탱크 등 군수물자를 독일에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1945년 1월 르노 그룹의 모든 회사는 국가에 몰수됐다. 대주주 르노의 주식은 단 한권의 보상없이 몰수됐다. 르노뿐만 아니었다. 민간항공사였던 에어프랑스를 비롯, 글디의 프랑스 기업들이 나치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국유화됐다.

프랑스의 과거청산은 가속화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진행됐다. 비

시정권(나치점령하의 프랑스 괴뢰정권)의 대통령을 지낸 '1차대전의 영웅' 패랭 원수는 90세의 나이에 사형을 언도받았고, 결국 감옥에서 죽었다.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과거청산 사례인 프랑스의 경우다.

박흥식(1901~1988)은 일제 때 친일을 통해 천문학적 부를 이룬 '화신그룹'의 총수다. 그는 태평양전쟁이 타지자

'조선비행기회사'를 설립하고 일본군에 비행을 납품했다. 그가 1948년 '반민특위'가 구성되면서 반민족행위자 제1호로 구속된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1년도 못돼 와해됐고 그는 석방됐다.

온갖 호사와 권세를 찬고 그는 모든 회사는 국가에 몰수됐다. 대주주 르노의 주식은 단 한권의 보상없이 몰수됐다. 르노뿐만 아니었다. 민간항공사였던 에어프랑스를 비롯, 글디의 프랑스 기업들이 나치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국유화됐다.

프랑스의 과거청산은 가속화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진행됐다. 비



르노와 박흥식

누린 다른 친일파들도 마찬가지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가 지난 2일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9명의 소유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광복 이후 무려 62년만이다. 환영할 일이지만 프랑스의 사례에 비춰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법조칼럼

임태호



지난달 30일 고대하던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개정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하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 재정신청제도 확대,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목자가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주목하는 규정은 재정신청제도를 대폭 확대한 부분이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시정할 목적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또한 기소편의주

년부터는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기존 3개 범죄는 물론 모든 고소 범죄로 확대됐다. 재정신청을 하기 전에 검찰에 항고 절차를 거쳐 항고가 기각되면 곧바로 재항고 절차를 거쳐지 아니하고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와 같은 재정신청 제도의 전면 도입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법원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던 불기소처분 사건을 모두 떠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기대대로 사건이 폭증할 수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 우선 재정신청을 관할하게 된 고등법원의 재판부 증설이 불가피해졌다.

확대된 재정신청 제도에 대한 기대

의에 대한 규제제로서 미려된 재판상의 준거소 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의 개정당시에는 모든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허용하였으나, 1973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재정신청 대상범죄는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공무원 범죄인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에 해당되는 범죄만으로 축소됐다.

그러다보니 위 세 개의 범죄 이외의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고 기각되었을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고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많이 이용되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

재정신청 제도의 전면 확대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제한 장치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항 도입되는 제도라면 법원은 재판부 증설에 따른 관사·부장관사 수 증원, 판사실 확보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불신, 특히 검찰 불신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 검찰, 검찰에서 조사한 서류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직접 증인신문 등의 심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의 전면 도입은 한편으로 사기·횡령·공갈·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인의 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소모 보여지기도 하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법원의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

기고

선성수



우리는 신문, 방송에서 수많은 청소년 사건의 기사를 읽는다. 청소년 사건에는 반드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며, 그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불량 청소년만은 아니다. 피해자가 길을 걸다가 웃었다고, 쳐다보았다고,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았다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등 이유는 다양하나 결국은 가해자의 욕구 불만의 결과일 때가 많다.

이들은 같은 시대에 태어나 같이 자란 인생의 동행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각기 다른 성격을 형성해 왔을 뿐이다.

가해 청소년들은 사회가 자신들을 차별해 왔다고 주장한다. 성장과정에서 의·식·주의 차이와 학력 수준이나

또한, 우리 자녀들이 생활수준이 다르고 공부도 못하며, 말쑥한 피우는 이웃 집 자녀들과 어울려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함께 놀지 못하도록 철저히 격리시키기도 한다.

우리 자녀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잘 자랄 때 우리 주위에는 이를 부러워하며, 질투하며, 사회의 불공정성을 원망하며 자라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이 자라면서 완력을 행하고 절제력이 없어지고, 자신을 행동에 제재하는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되면서 점점 불량화한다. 사회에서는 아니 우리 모두는 이들을 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그 청소년과 그 청소년의 부모를 탓한다.

남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보살핌을

하는 일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 등 항상 자신은 차별받고 살고 있다는 열등의식 속에서 자란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 정성을 쏟으면 쏟은 만큼 차이는 심해지고, 절망감을 느껴 살아가는 청소년의 숫자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더 잘 읽고, 더 건강하기를 기대하며, 사랑하고 모든 것을 투자한다. 다른 자녀는 관심없다. 내 자녀만 더 나은 되고, 내 자녀만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게 된다.

부모가 없는 이웃집 자녀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 눈물을 삼키며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신문·방송에 나오는 불량 청소년이나 그들에게 희생되는 사람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고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

이렇게 불량화한 청소년들은 윤락하게 자란 우리의 자녀들을 노린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일이 우리 자녀에게는 일어나서는 안되고, 일어 날 리가 없다고 믿으며 산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는 동연배 학생들을 총으로 난사한 미국의 한 청소년, 친구를 살해한 우리나라 중학생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녀만 잘 기르면 된다는 사고, 불량한 청소년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된다고 마음의 담장을 쌓는데 힘쓰는 소극적인 자녀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모두는 적극적으로 내 자녀와 함께 이웃의 자녀들도 함께 사랑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의 배품과 진심 어린 사랑이 바로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관공서 전화응대 많이 좋아졌지만 실속은 별로 없어

최근 공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려고 관공서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어찌나 힘들던지 결국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는 방법을 선택했다. 친절, 미소 캠페인이 지속된 덕분에 요즘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공무원이 눈에 띄게 늘어난 사실이다. 그러나 실속은 별로 없어 보인다.

상냥한 말투는 좋았지만 문의사항에 대해 시원스레 답변을 얻은 적은 많지 않다. 재차 문의한 부서에서도 자신의 부서 소관이 아니라며 타 부서로 문의하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돌려주기는 하는데 그럴 경우 부급 전

에 했던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다시 설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돌다가 처음 전화가 연결된 직원과 다시 통화가 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공무원들이 자기 본인의 업무가 아닌 죄다 알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민원인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찾은 뒤 그 내용을 설명하고 민원인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도록 한 다음 전화번호를 상호간에 알려주는 게 제대로 된 민원인 응대법 아닐까?

▲정영환·광주시 동구 총장보

농번기철 차량 안전운행에 주의해야

농촌에서는 흔히 경운기나 트랙터가 후미 반사등이나 조명등이 없거나 낡아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운행하는가 하면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기도 한다.

특히 농기계를 운전하는 연령층이 주로 노년층으로 조작이 미숙하거나 순간적인 행동대처 능력이 미흡해 사고가 많다. 문제는 농기계 대부분이 마땅한 안전장치가 없는 무방비 상태로 사고발생시 골절이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

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차량 운전자들은 언제나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도로를 운행시 방어운전 등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민들도 농기계의 전조등을 켜거나 야광 반사경 부착 등 차량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경운기 적재함 등 농기계에는 사람을 태우는 일은 삼가해야 할 것이다.

▲채필재 합평경찰서 순찰파출소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시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